

제3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장 원 석*

I. 분석의 시각

공산주의체제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시각의 하나로서 우리는 전체주의 모델을 흔히 들고 있다. 이 시각은 주로 스탈린 치하의 소련정치체제(蘇聯政治體系)가 보여준 독특한 정치현상을 분석하는데 쓰여진 것으로서, 미국의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Zbigniew Brzezinski)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들이 주장한 전체주의체제(全體主義體制)가 갖는 여섯가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나, 여기서 다시 한번 열거해 보면 그것을 ①관제 이데올로기 ②독재자와 단일 대중정당 ③공포적인 경찰의 통제체제 ④신문, 방송, 영화 등의 효과적인 모든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독점 ⑤군에 대한 거의 완전한 독점적 통제 및 ⑥전 경제의 관료적 통제이다.¹⁾

그런데 이 시각은 오늘날 다원화(多元化)와 내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공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전임강사

1) 전체주의체제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Carl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eleirich Praeger, 1965). 그리고 이 책은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崔雲芝, 「全體主義 獨裁政治論」(서울: 抵林社, 1972).

제 3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산체제를 분석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비판을 받는다.²⁾ 왜냐하면 전체주의 모델의 가장 큰 맹점은 혁명후 초기단계나 동원단계에서 볼 수 있는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공산정권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공산정권의 안정성과 제도화라는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내부에서 발생하여 온 중대한 변화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데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두브체크정권의 개혁정책이나, 1970년, 1976년, 1980년 세차례에 걸친 폴란드 노동자들의 성공적인 항거운동, 그리고 미·소의 데탕트와 이에 따른 동구와 서방진영과의 공존관계 등을 전체주의적 모델에는 부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 이 시각은 스탈린 사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시위와 스트라이크 등의 항거운동은 그 성격이나 방향이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적인 데도 불구하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운동인 것으로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³⁾

그러나 공산주의체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체주의 모델이 전혀 무가치(無價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적어도 공산주의체제가 그러한 모델로부터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⁴⁾ 브르제진스키도 이 모델의 특징이 오늘의 소련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특징의 다수가 공산주의지도자에 있어서 역기능적임을 시인하면서도 強制的 또는 集中的 社會變換의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全體制力의 관제를 확립하려는 정치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분석적 범주로서의 效用을 주장하고 있다.⁵⁾ 또한 우리가 공산주의체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변동의

2) 전체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은, ① Leonard J. Cohne and Jane P.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Y.: Anchor Press/Doubleday, 1974), pp.xxvi~xxvii 및 ② Danhwart A. Rustow, "Communism and Chang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70) 참조.

3) 이정복, "東歐 공산주의체제의 성격과 변화," 金學俊編, 「現代蘇聯의 解剖」(서울:한길사, 1981), p.342.

4) 이러한 면에서 전체주의 모델의 유용성을 논하는 대표적인 글로서, Alex Inkels, "Models and Issues in the Analysis of Soviet Society," Survey, No.60(July, 1966), Reprinted in Richard Cornell(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A Book of Reading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0) 참조.

5) 이용필, 「北韓政治」(서울:大旺社, 1982), pp.25~26.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시기에서 조망하는 경우, 자칫 그 안의 '변하지 않는 부분' 내지 아직 잔존하는 全體主義의 要因을 경시하기 쉽다. 따라서 변화를 직시하되 불변하는 요인에 대하여도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상과 같은 전체주의 모델의 유용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구 공산체제는 많은 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은 사실이다. 변화들 가운데는 테러 및 테러의 도구가 되는 비밀경찰에 대한 제한이나 단속, 일인체제에서 집단적인 과두정치체제로의 전환,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제정책결정의 지방분권화,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엘리트의 등장 및 여러 형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대두 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하지 않은 전체주의적 요소도 간직하고 있음도 사실이다.⁶⁾ 본고는 그 변화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내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전체주의적 시각의 유용성은 충분히 원용이 가능하다.

한편, 여기서 동구는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여덟 나라를 지칭하고 이 여덟 나라는 각기 그 역사적 전통, 민족적 구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체제적 특징을 한데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동구공산체제의 특징

전후에 수립된 동구제국의 공산정권들은 여러 면에서 소련이나 중공국 모델로 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이들 동구국가들은 또한 마르크스주의 보다는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레닌주의

6) 따라서 동구제국은 全體主義와 多元主義의 양극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여러 나라 간의 同質的 基本 構造에 대한 일반적 논의없이 動態的 양상만을 예시하는 것은 동구체제의 전체 모습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면의 균형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먼저 남아있는 전체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부분은 다음장을 참조할 것.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에 충실한 것을 보여 준다.⁷⁾ 동구국가들을 지배하는 정당의 이름이 공산당(共產黨)이든 노동당(勞動黨)이든 또는 사회당(社會黨)이든, 모두가 레닌주의에 입각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된 특징으로는 ① 국가보다 공산당이 우위를 점하는 위계체계, ② 진보적이고 인민본위(人民本位)의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이비 민주주의의 강조, ③ 사회의 조직화 및 동원체제의 확립, ④ 강력한 당지도자의 출현과 권력집중, 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중앙집권적인 경제계획수립과 실시, ⑥ 반대세력을 제거 또는 억압하기 위하여 테러나 철저한 정보통제 및 검열제도의 이용, ⑦ 공산주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정치교육과 선전 및 선동활동의 강화 등 몇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동구 8개국 모두가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위에 지적한 사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그들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동구제국의 특징은 동구제국이 전체주의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⁸⁾

동구제국의 이상과 같은 전체주의적 특징은 스탈린 사후 脫스탈린화를 추구하는 체제변화과정속에서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근본적으로 개혁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정치체제의 기본적 메카니즘

동구공산주의 정치체제는 세가지 하위체제로 구성된다.⁹⁾ 즉, 당(黨) 국가기관 및 다양한 사회대중조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치적 하위체제 상호간의 연관구조 측면에서 볼 때, 당은 여타의 하위체제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정

7) 공산국가에 있어서 黨의 지위에 관해서는, 張明奉, “共產主義國家의 權力構造에 있어서의 共產黨의 地位”, 국토통일원, 「統一政策」 제3권 3호, 1977, pp. 236~252.

8) 金學俊·全寅永 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依: 理念과 體制를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 p. 176.

9)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① 金達中外 共著, 「東歐政治·經濟·社會論」(서울: 博英社, 1985), pp. 35~51, ② 安秉永, “東歐諸國의 利益表出과 政策過程이 比較”, 연세대東西問題研究院, 「共產國家에 있어서 政策 및 政策過程의 比較研究」 제1집, 1978, pp. 7~45 참조.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치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하위체제를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지위를 향유한다. 이렇게 볼 때, 당은 정치체제의 통합성을 부여하는 우월적 존재인 것이다.

(1) 레닌주의적 정당 : 공산당(共産黨)

동구국가들을 지배하는 정당의 이름이 공산당(共産黨)이든 노동당(勞動黨)이든 또는 사회당(社會黨)이든 간에 레닌주의적 당이론(黨理論)에 기초한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¹⁰⁾ 레닌에 있어서 당이란 철통같은 규율을 가진 소수 정예의 직업혁명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당은 성격과 민주적 중앙집권주의(democratic centralism)를 지도원리로 하는 전위당(vanguard party)이 되어야 한다.¹¹⁾ 그리고 공산당의 목적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데 있으며 그 하부의 모든 체제는 당의 절대적 지위에 귀속된다.

이러한 레닌주의에 충실한 전체주의정당은 동구공산 초기에는 뚜렷하였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에는 다소 공산당의 선도적 역할이 위협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는 인정되고 있으며, 여타의 기구에 비해 우위에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이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기본적 정치문제에 대한 권위적(權威的) 결정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하위체제의 지도 및 통제의 경우에 까지 해당된다.

당조직(黨組織)의 기본적 권위원리(權威原理)는 레닌주의적 전통의 민주적 중앙집권주의(中央集權主義)인데, 그 중 민주적 원리는 경시되고 '중앙집권주의'의 특징만이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 그러기때문에 동구공산주의체제의 대부분이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관료독재(官僚獨裁)로 전락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소수의 핵심 당원집단들

10) 오늘날 동구제국의 정당체제는 사실 一黨制度를 택하는 나라와 多黨制度를 택하고 있는 나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외관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지배당인 공산당의 조정을 받고 있는 위성정당에 불과하다.

11) Richard T. de George, *Patterns of Soviet Thought* (Ana Arber, paperbacks, 1970), pp. 131~140 참조.

12) 金達中의, 「東歐政治·經濟·社會論」, op. cit., p. 37.

제 3 장 동구 공산체계의 특징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당의 결의는 당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사회대중조직에도 절대적 구속성을 부여한다.

대체로 국가기관 및 사회조직의 주요 책임담당자는 거의 예외없이 공산당 당원이며, 따라서 일차적으로 당규(黨規)에 복종이 전제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사회대중조직의 정상급 간부들은 대체로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당기구의 주요 멤버이므로 당결의에 스스로 참여한다. 따라서 당의 의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어긋남이 없이 옮겨진다.¹³⁾

당은 여타의 정치적 하위체계의 주요 간부의 충원(充員) 및 승진, 전임에 깊숙히 관여한다. 그 방법으로는 이른바 「命名制度」(Nomenklaturesysteme)¹⁴⁾와 일상적 인사정책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국가, 경제 및 사회분야의 주요 직책에 관한 중앙당지도층의 동의권(同意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동구제국(東歐諸國)의 경우 내각의 모든 관료, 부성(部省) 및 기타 중앙행정관서(中央行政官署)의 장(長), 대기업(大企業)의 지배인, 외교관, 고위군사지도자, 주요 사회대중조직과 정상간부급의 경우 그 임명에 있어 당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은 그의 「幹部政策」(Kaderpolitik)에 따라 간부의 선택, 교육 및 그 임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며 이에 따라 이른바 인사정책(人事政策)의 척도 내지 경력패턴(Karriermuster)이 정해진다. 이들 나라의 경력패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른바 「政治性」(黨性)과 「專門性」의 비중이다. 동구제국에 있어 스탈린 사후에는 정치성에 비해 전문성의 비중이 계속 높아졌고 전문성 또한 기능적으로 점차 분화되어 고려되고 있음은 많은 연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의 비중은 여러가지 변수의 작용에 의하여 가변적이며, 아직도 정치성과 전문성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경우 전자가 우선되는 경우가 상례이다.¹⁵⁾

(2) 국가기관 : 행정부(行政府) 및 의회(議會)

대체로 당(黨)의 우위성(優位性)이 보장되고 있는 공산주의체계에 있어서 국

13) 安秉永, “東歐諸國의 利益表出과 政策過程의 比較”, op. cit., p.17.

14) Vgl., B. Harasymiw, “Die Sowjetisch Nomenklatur,” in Osteuropa 1977, 583ff., 655ff. 위책에서 재인용.

15) 安秉永, Ibid., p.18.

제 3 장 동구 공산체계의 특징

가기관은 당의 결정을 집행하거나 정당화시켜 주는 수단적이고 시너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당이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을 지도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동구공산주의체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즉 동구에 있어 당과 국가기관의 이원성(二元性)은 양자간의 조직 중첩으로 인하여 그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긴하나, 대체로 당권(黨權)이 행정영역에 확대됨에 따라 ‘행정(行政)의 정치화(政治化)’는 필지의 과정이 되었다.

여기서는 집행권의 중추(中樞)인 행정부(行政府 : 각료회의 council of ministers)와 입법권을 맡고 있는 의회(인민회의 national assembly)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¹⁶⁾

대체로 동구의 정부는 소련의 모형을 답습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의 집행수단의 구실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政治的)’이 아닌, ‘관료적(官僚的)’ 행태를 보이며, 그 안에서 전개되는 데 이익간의 갈등과 공중(公衆)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채 연막뒤에서 처리되었다. 이미 위에서 시사하였듯이, 당이 행정과정(行政過程)에 깊숙히 관여함으로써 ‘정치화(政治化)’된 행정과 여기서 비롯되는 행정능률의 결손이 문제시되고 있다.

실로 동구제국의 정부관료제는 예외없이 비능률,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부정과 비리 등 흔히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집약되는 여러가지 현상들 때문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및 체제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불신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동구공산정권은 숙청, 재조직화 등 여러 가지의 대응책을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관료제의 역기능이 심화되는 주요한 이유는, 관료조직의 분업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료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과 더불어 창의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誘因體制가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의회도 당의 통제가 약화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적이 있으나, 대체로 당이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글자 그대로 위엄적(威嚴的)·의례적(儀禮的) 제도(制度)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16) 金達中外 共著, 「東歐政治·經濟·社會論」, pp. 47~51 참조.

제 3 장 동구 공산체계의 특징

헌법상 인민의회는 최고의결기관이고 집행권과 사법권의 최종적 소재도 이곳에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인민의회는 내각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고 그 역할도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인민의회 의원의 선출도 헌법상으로는 국민대중이 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민대중은 공산당이 결정한 단일후보에 찬반투표를 던질 권리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의원지명 및 선출과정 자체가 당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조작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회에서 중시되는 대표기능이나 정당성 수호기능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사회대중조직

공산주의자들의 정권장악에 성공하게 되면, 거의 예외없이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전제가 되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원단계에 있어서 대중들을 조직화하고 집단화는 불가피하게 된다.

동구의 공산주의적 동원정권들도 공산화를 성취한 이후 예외없이 낙후된 이들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했다. 고도로 집권화된 계획과 통제, 대규모의 국유화·집단화 등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주민들을 동원하고, 사회 깊숙히 침투하여 국민들을 통제하고 동원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동원조직의 대표적인 예들로 우리는 勞組, 靑少年團體, 組合組織 및 女性團體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동구제국에 있어서의 수많은 사회대중조직은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동원집단의 역할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즉, 이제 이들 사회대중조직은 기존의 「動員化集團」(mobilizing groups)의 역할과 함께 정책결정 과정에 집단이익을 표출시키는 「압력집단」(pressure groups)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것이 점차 이들에게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동구 모든 나라에 공동된 흐름도 아닐 뿐더러,¹⁸⁾ 아직도 이들 사회대중조직들

17) B. N. Toporin. Das politische System des Sozialismus (Berlin-ost, 1974) S. 158ff. 安秉永, “東歐諸國의 利益表出과 政策過程 比較”, p. 21에서 재인용.

18)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로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정도라고 하겠다.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은 법적으로 당의 정치적 의지를 대중에게 침투시키기 위한 수단적 존재라는 측면이 강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은 자율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익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상층적으로 투사시키는 다원적 민주사회의 이익집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정치체제의 유지·강화 방법

어떤 정치체제도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위기, 정통성의 위기, 참여위기, 분배위기, 그리고 침투위기를 방지하거나 극복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¹⁹⁾ 즉, 국가의 능력이란, ①재화나 인력 또는 용역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체제의 추출능력, ②국민들에게 경제적 재화나, 교육 또는 건강문제에 관한 서비스, 또는 지위나 명예 같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분배능력, ③범죄인을 처벌하고 의무와 권리를 준수케 하는 규제적인 능력, ④미래를 약속하거나 역사적 과거 사실에 호소할 수 있는 상징적 능력 등과 같은 것을 가짐을 뜻한다.²⁰⁾ 어느 국가이건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낼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그 체제유지가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공산정권의 경우, 그 정권수립과정과 정권장악 이후 몇년간을 혁명적·유토피아적 공산사회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사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체제 공고화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이고 규범적인 주장과 설득만으로는 체제구축을 위한 동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 때문에 그들은 지배체제를 위해서 많은 숙청과 테러작업을 벌여야 했고 주민동원을 위한 세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만 했고,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목표에 부합되는 문화의 창달과 공산주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이념교육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즉, 유토피아적 공산사회라는 영상은 모든 희생을 요구하고 반

19) See Leonard Binder, "The Crises of Political Development," in Leonard Binder et al., *Crises and Sequences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1), pp. 52~67참조.

20)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8), pp. 286~287참조.

제3장 동구 공산체계의 특징

대자에 대한 강압이나 폭력까지도 정당상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구공산주의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아직까지도 체제유지 방법으로써 테러라든지 의도적 정치교육은 근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동구공산체제는 위에서 전제한 바 있는 국가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 정치폭력을 통한 체제유지

정치테러는 어느 정치당국의 기관들이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하여 임의로 가하는 극심한 강압적 조치나 위협, 또는 그러한 대상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테러는 정치적 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²¹⁾ 주지하다시피 스탈린체계의 통치정책은 대대적인 테러와 숙청이었다. 특히 여기서 특이한 점은 소련에서의 스탈린 테러와 숙청정책은 그의 반대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자에게도 무자비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²²⁾ 이러한 경우, 테러는 직접적인 희생자들 보다도 더 포괄적인 대상그룹에 가공의 공포와 절망적인 심리적 충격까지 가하는 효과를 갖게되는 것이다.

동구제국의 경우도 그 체제구축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테러에 의하여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물론 동구의 스탈린 체제는 1930년대 후반의 소련의 경우보다 훨씬 부드러웠으나, 그래도 그것은 통치의 가장 기본적 수단 중의 하나였다.

동구에 있어서 정치테러가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1956년 10월의 헝가리 혁명의 도화선이 비밀경찰의 쏜 최루탄에서 비롯되었고, 그 뒤에 비밀경찰요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보복행위가 따랐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²³⁾ 또한, 1953년 12월에 폴란드에서 서방으로 망명했던 수비아틀로(Swiatlo)에 의한 비밀경찰의 잔악성에 대한 폭로로 인하여 폴란드 비밀경찰

21) Alexander Dallin and George Breslaure, "Political Terror in the Post Mobilization stag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0), p.192참조.

22) Wlodzimierz Brus, *socialist Ownership and Political Syste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3), pp.55~56참조.

23) 이하의 내용은 金學俊, 金寅永 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 理念과 體制를 중심으로」, pp.223~226에서 참조.

제3장 동구 공산체계의 특징

조직에 대한 일대 숙청이 전개되었던 일도 있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밀경찰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권력의 ‘도구’이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연정구성시(聯政構成時) 공산주의자들은 내상과 경찰고위직을 공산주의자들로 채웠던 것이다. 헝가리의 라코시가 적대세력을 살라미 잘라내듯 차례로 제거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사용된 칼은 다름 아닌 비밀경찰이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등지에서 전후 선거를 치루었을 때도 이들에 의한 정치테러 행위를 효과적으로 이용했었다.

스탈린시대를 벗어나면서 동구국가들은 비밀경찰에 의한 정치테러행위를 완화하는 정책을 썼다. 즉, 그것은 이의 적용을 대대적인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체제를 반대하는 자에게만 국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탈린시대에는 국민대중이 정권에 반대하지 않고 그들 각자의 생업에 전념하여도 언제 테러와 숙청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으나, 1956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구의 국민은 정권에만 반대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²⁴⁾

그러나, 기존질서나 가치를 과격하게 파괴하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정치테러’를 없앤다는 것은 반체제세력의 성장을 허용한다는 고민을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1956년 ‘폴란드의 10월’ 변혁을 겪고 제1서기가 되었던 고물카가 비밀경찰의 행위를 규제하고 법치정치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점증되는 비판세력 때문에 그 자신이 실각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동구국가들과 같이 전전(戰前)부터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경우에는, 정치테러를 늦춘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즉 서구의 영향을 피할 길이 없다는 현실과 카톨릭교회와 같은 강력한 이질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화된 정치테러의 기능약화는 필연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구에서 테러와 숙청은 아직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2) 의도적인 정치사상교육

정치적 테러나 숙청이 체제유지·강화를 위한 어느 정도 일시적이고 단편적

24) 이정복, “東歐 공산주의 체제의 성격과 변화”, op. cit., p. 351.

제3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인 방법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체제 동조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 곧 정치사회화(정치사상교육)라고 하겠다. 즉, 공산주의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인간(人間)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나 선전·선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린이나 학생을 공산주의적 정치문화에 적응하게 하며, 성인들을 정치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이 되도록 개조하려는 것이다.

물론 정치사회화는 공산체제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 어느 체제이건, 그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공산주의적 정치사회화는 의도적인 작업이며 명시적인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될 뿐 아니라 주형화된 획일적 인간을 이상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공산주의적 정치사회화는 서구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좀더 의도성이 내포된 ‘정치사상교육’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라 생각된다.²⁵⁾

어느 공산체제와 마찬가지로, 동구에서의 정치사회활동 투입(投入: input) 기능면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가 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²⁶⁾

동구에 있어서 정치사회화는 두가지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성인세대로부터 아이들세대로 전달되는 정치사회화이며, 둘째는 성인으로부터 성인에게 전달되는 재사회화(再社會化)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른 정치체제에서도 볼 수 있는 공동현상이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성인들을 재사회화하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규범이 새로운 체제의 가치관과 현격하게 달라 새 지도층으로부터 혐오를 받은 혁명후체제(革命後體制)에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25) 정치사회화가 정치교육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정치교육은 ‘의도적인 정치사회화’라고 볼 수 있다. Willem Langeveld, *Political education for teenagers*, 박용현 옮김, 「政治教育」(서울·大學敎科書株式會社, 1982), pp. 10~13참조. 그리고 서구 민주사회에서 나온 정치사회화 이론의 공산사회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양체제간의 정치사회화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安秉永, “政治社會化의 비교연구序說”, 同著, 「現代共產主義研究」, op. cit., pp. 312~339.

26) 동구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대표적인 글로서는, Ivan Völgyes,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in Ivan Völgyes (ed.),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A Comparative Framework* (N.Y.: Praeger Publishers, 1975), 그리고 그의 글을 강성학이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姜聲鶴, “東歐의 政治社會化”, 국토통일원, 「統一政策」 제2권4호, 1976, pp. 71~83.

제 3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동구에서 후자의 재사회화 과정은 두가지 형태를 취했다.²⁷⁾ 하나는 혁명적 혹은 스탈린적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적 형태이다. 재사회화의 혁명적 형태는 공산주의의 정권장악 직후의 시기에 우선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때에 신정권들이 각 인민들에게 과거의 규범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치체제에 적어도 공식적으로 추종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재사회화의 혁명적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공개적이고 열광적인 과시와 그 가치의 명시적 수락이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과시된 신념에 대한 추종의 진지성이나 진실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인민대중들이 노동일(May Day)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를 진실로 원했는가 알렸는가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참가의 행동 그 자체였다. 스탈린의 비오성(非課性)에 대한 믿음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오류의 공개적이고 열광적인 선언이 중요했다. 동구에서 재사회화의 스탈린주의 단계는 보통 끝났다고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는 실제 스탈린 사망 훨씬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실로 동독, 알바니아,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었으며, 「두브체크」의 실각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도 재도입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적어도 스탈린주의적 통치방식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혁명적 사회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스탈린의 사망이후에는 재사회화의 혁명적 형태로부터 소위 연속적 재사회화(continum re-socialization)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 연속적 사회화는, 통치의 비인간화나 법치화를 추구하며 혁명적인 과제수행보다는 체제유지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서, 현정권의 가치와 규범들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수용할 것을 강제한다. 즉 이는 방법면에서 좀더 세련되고 통치자들에 의한 보다 차원 높은 의식적 통제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적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 없는 것이다.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로서 1차집단 보다는 2차집단(학교, 당, 군대, 노조, 청소년집단, 조합조직, 여성단체 등)을 강조하며²⁸⁾

27) 강성학, “東歐의 政治社會化,” Ibid., pp. 72~73.

28) 물론 동구에서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로서 1차집단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체제차원에서 보는 것이며, 이때 동구제국은 1차집단과 2차집단간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하여 어릴때부터 어린이들을 탁아소나 유치원 등의 조직망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시키고 있다.

제3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특히 당을 모든 정치사회화의 내용이나 강도, 수단 및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화과정을 감독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공산정권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정치 사회화를 추진시킨다.

또한 정치사회화의 주제도 나라에 따라 조금씩 우선순위가 다르긴 하지만, 볼게스의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사회주의건설(社會主義建設)이 가장 강조되는 주제이며 다음으로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사회주의(社會主義) 도덕성(道德性), 애국(愛國), 반개인주의(反個人主義) 등의 순서이다.²⁹⁾

이상과 같은 제 사실은 그 정치사회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든,³¹⁾ 아직도 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적 정치사상교육은 강조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3. 경제체제 개혁의 한계

동구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사회주의화하면서 스탈린체제를 도입,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스탈린체제란, 소련에서 스탈린이 수립한 경제, 정치적 체제를 지칭하고, 동구에도 이 체제가 강요되었기 때문에 1948년 이후 스탈린 사망시까지의 동구공산주의 체제도 스탈린체제였으며,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아직도 스탈린체제는 동구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스탈린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 생산수단의 과격한 국유화이고, 그것은 다음 세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³¹⁾ 첫째는 국유화된 생산수단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그 국유화의 속도가 아주 빨랐다는 것이다. 둘째 특성은, 국가가 중앙에서 고용과 소비분야의 개인선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적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을 명령체제에 의해 각 기업체에 하달하는 식으로 경제를 경영한다는 데 있다. 셋째 특성은, 국가소유로 되어있지 않고 집단소유로 되어있는 경제영역도 실제로는 국가의 중앙집중적 명령체제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29) 강성학, op. cit., p. 78~80참조.

30) 동구의 정치사회화의 결과는 반드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유화 물결이나 반소운동들은 그 좋은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金學俊·金寅永,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 op. cit., p. 223.

31) 이정복, “東歐 공산주의 체제의 성격과 변화,” op. cit., pp. 344~345.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다음에서는 이와같은 스탈린식 경제모델이 동구제국에 부과된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동구경제체제의 소비에트화

먼저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1945년 10월 24일 임시국회에서 국유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은행, 보험, 탄광, 군수시설, 철강, 화학공업이 국유화되었고, 4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갖고있는 모든 기업이 국유화되었다.

국유화율은 1946년에 전체 공업노동력의 57.7%가 되었고, 1948년에 이르러서는 63.9%로 증가되었다. 한편 400명 이하의 개인 기업들은 사업의 번창으로 4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되어 갔다. 공산당은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고 반대자들은 1945년의 국유화법을 고수하려하였다. 이러한 대립의 1948년 2월 쿠데타의 한 요인이 되었는데, 쿠데타 이후의 새국유화법은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규정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더 작은 기업도 국유화되었다.³²⁾

폴란드의 국유화법은 1946년 1월, 국민평의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독일인 기업들은 분야 규모를 불구하고 보상없이 국유화되었다. 광산, 커뮤니케이션, 군비, 설탕, 직물, 인쇄 등의 기업들도 소유주나 규모에 관계없이 보상에 의한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그 이외의 분야는 50명 이상의 기업들을 보상에 의하여 국유화하였다. 개인기업의 창설은 창립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고, 또 이미 국유화되어진 분야는 허락되지 않았다.³³⁾

헝가리는 1949년초에 광산을 국유화하였고, 같은 해 말에는 3개의 대 중공업 주식회사를 두개의 국가기업과 합병시켰다. 1948년 1월에는 모든 은행이 국유화되었고, 같은해 3월에 국유화법이 제정되어 100명 이상의 기업이 국유화되었다. 헝가리의 국유화는 점진적이었고 1950년에 국유화율이 90.5%였다.

루마니아에 있어서 국유화 첫단계는 1947년 여름, 공업국을 창설하여 분야 별로 수개의 공장을 집단화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공업국은 원로나 설비의 할

32) Hugh seton-Watson, "Economic Recovery and Planning," Roger Pethybridge (e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st Bloc* (Boston: D. C. Heath and Company, 1965), p.83.

33) Ibid.

제 3 장 동구 공산체계의 특징

당을 통제하였고 생산품목과 판로를 결정하였다. 공식적인 국유화는 1948년 6월에 실시되었는데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국가에 중요한 모든 기업으로 국유화의 범위가 규정되었다. 1949년에 국유화부분은 전체 공업생산의 85%를 차지했고, 1952년에는 92%가 되었다.³⁴⁾

불가리아는 1947년 12월에 공업분야의 국유화가 단행되었는데 생산부문은 6%에서 93%로 증가되었다.

동구국가들은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가면서 장기경제계획에 착수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는 1949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헝가리는 1950년에 제1차5개년 계획실, 폴란드는 같은 해에, 6개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알바니아는 2개년 계획을 완료하고 195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착수했다. 이러한 동구의 장기경제계획은 소련경제 모형에 따라, 공업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였고, 공업중에서도 중공업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³⁵⁾

동구에 있어서 농업집단화 및 농업협동조합화는 1948년 6월 28일 코민포름에서의 유고슬라비아 파문 결의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³⁶⁾ 동구국가들의 농업집단화는 소련의 콜호즈(kolkhoz), 즉 협동조합을 모형으로 삼았다. 동구에 있어서 국영농장은 독일인이 살았던 영토, 즉 주인없는 토지가 중심이 되었다. 동유럽 국가들 중, 1951년 말에 집단화에 가장 앞선 나라는 불가리아였다. 공식발표에 의하면, 1946년 전국토지의 3.7%만이 협동조합화되어 있었으나, 1947년에 4%, 1949년 14.3%, 1950년에는 면적 553헥타아르를 보유하는 생산협동조합이 1,600개가 되었다. 1951년 초에는 토지소유자 전체의 53.8%가 2,729개의 협동조합에 조직되어 경지면적의 47.9%가 협동조합에 속하였다.

1951년 1월 폴란드에서는 협동조합의 수가 2,220개였고, 같은해 5월에는 3,036개로 증가하였다. 폴란드의 농업집단화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였는데, 국영농장까지 합하면 전체의 5분의 1이 사회주의 부문에 속한다.

헝가리의 협동농장수는 1950년 초에 1,760개, 같은해 말에는 2,229개로 46

34) Ionescu Ghita. *Communism in Rumania 1944~1962*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6), pp.161~173.

35) 최동희, 「소련과 동구관계론」(서울'종로석적, 1985), p. 79.

36) 최동희, Ibid., pp.80~85와 특히, 김한규편, 「동구권경제론」(서울'경음사, 1985), pp.440~59참조.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만헥타아르의 면적을 차지하였다. 같은해 겨울에는 260개의 사회주의 촌락과 도시가 형성되어 1만 삼천에서 이만 팔천인에 달하는 4개의 대규모 농민촌락이 생겼다. 1952년 4월 협동조합은 4,950개로 증가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농업집단화는 1950년에 급속히 진전되었다. 1951년 9월, 체코슬로바키아에는 5,812개의 협동조합과 1,761개의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국가관리하에 있는 토지는 전경지의 25%를 차지하였다.

루마니아의 협동조합은 1950년 3월 18개에서 10월에는 1,006개, 12월에는 1,029개로 증가되어, 협동조합에 속한 가족과 면적은 각각 6,500세대와 278,000헥타아르가 되었다.

한편 농촌에 있어서의 계급투쟁과 자본주의적 요소의 배제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문당한 유고슬라비아가 실시했던 협동조합은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³⁷⁾ 첫째는 농민은 토지와 가축을 소유하고, 협동조합은 농기제만을 소유하면서 집단경영으로 수입에 따라 산출된 임료를 농민에게 지불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임료가 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유형이며, 셋째는 임료는 없고 공동체가 올린 수입분은 농민에게 분배되고, 농민은 계속 토지의 소유자이며 협동조합에서 탈퇴도 가능한 유형이다. 1949년 유고슬라비아의 협동조합중 63.5%가 세번째 유형이었다. 동독에서는 1945년에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100헥타아르가 넘는 토지 소유는 몰수되었다. 230만헥타아르의 토지가 5십만 인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구조변화는 1952년에 가서야 사회주의 건설을 선포하면서 농촌협동조합이 선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처럼 동구제국에서 이루어진 농업집단화는 정치적으로 농민들의 독립 기반을 해체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농업을 직접적인 정부의 계획·통제하에 두어 대규모의 현대적인 농업기반을 확립하여 공업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농촌에서 조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³⁸⁾

(2) 동구국가들의 사회주의적 경제발전 추진과정 스탈린주의적 경제개혁의 한계

주지하는 바와같이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자원의 낭비, 생산성의

37) 최동희, op. cit., p.82.

38) Ibid., p.86.

제 3장 동구 공산체계의 특징

저하, 기술의 낙후, 투자효율의 감퇴 등 많은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구권이 사회주의화된 것은 물론 소련의 영향때문이었으므로 사회주의화의 초기단계에서 소련의 체제가 모범로 채택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결함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소련형 집권체제의 무조건적 수용에 대한 반성 내지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³⁹⁾

그 첫 케이스가 이른바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로써 알려진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이다. 1945년 티토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초기에는 소련형의 지령경제체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업의 국가적 소유와 관리는 필연적으로 통제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낳는다는 인식에서 일찌기 1950년말에 분권화의 경제체제가 도입되었다. 관료주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기업의 국가 소유제도를 지양하고 그 대신에 유고 특유의 기업의 사회소유에 입각한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⁴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구권의 모든 나라에서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경제 성장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이 경향은 선진적인 공업국일 수록 강했다. 이리하여 나라마다 경제체제의 개혁이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 때에 소련내부에서 먼저 개혁안이 제기되었다. 즉 1962년 9월에 프라우다지에 발표된 리베르만(E.G. Liberman)의 논문 「계획이윤·보상」이 그것이다. 「이윤방식」으로서 알려진 리베르만의 이 제안은 소련 및 동구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결국 계획지표로서 물량대신에 이윤을 쓰자는 것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기구의 합리적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 계획경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격의 합리적 형성을 위하여 자유경제에 입각한 시장경제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계획의 성격도 소련형의 의무적·명령적인 것으로부터 자유경제의 경제계획에서 보는 바와 같

39) 김민채, “동구권의 체제 변화와 한국,” 「사회과학대학」 제11집,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p.25.

40) 유고가 노동자 자주관리제도를 도입한 경제사상적 배경을 노동에 의하여 창출된 잉여가치를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것, 즉 인간의 노동이 자본가와 국가관료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채, Ibi., p.26참조.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은 예측적 지시적인 것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소련·동구에서 행해진 경제개혁은 이와 같은 계획과 시장과의 관계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⁴¹⁾

하나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원칙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꿈이 없이 단순히 계획지표로서 이윤방식을 도입한 경우인 데 소련을 비롯하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하나는 중앙집권적 계획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형성에 관한 자유시장의 원리를 접합한 경우인데 헝가리·폴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6년 이후 경제의 중앙집권적 경영방식을 조금씩 완화해 가던 동구제국은 1960년대 후반에는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구조개혁의 세부사항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공통된 기본내용만을 소개하기로 다.⁴²⁾ 동구내 경제구조개혁의 기본이슈는 세가지이다. 첫째는 중앙집권적 계획과 관리를 기업단위에서의 경영상의 자율성과 어떻게 배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도덕적 인센티브(사회적 이익)와 물질적 인센티브(개인적 이익)를 어떻게 배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셋째는 계획과 시장을 어떻게 배합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배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동구제국을 두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룹은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로 이곳에서는 기업의 자주성의 확대를 중앙집권적 계획화와 관리의 강화라는 골격내에 멈추게 했고, 물질적 인센티브는 도덕적 인센티브의 우위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했고, 시장은 계획의 보완수단으로 인정하여 계획의 명령적 성격을 견지했다. 둘째 그룹은 두브체크 실각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로 이곳에서는 중앙집권적 계획화와 관리를 실제로 축소시키면서까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고자 했고, 도덕적 인센티브를 물질적 인센티브에 종속시키고자 했으며, 계획의 의의를 시장의 수동적 반영에 위치시켜 계획으로부터 그 명령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외에 동구제국 중 불가리아의 경제계획은 위의 두 그룹의 중간에 위치하고,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가장 철저히 두번째 그룹에 속하고 알바니아에서는 전혀 이와 같은 개혁이 없었다.

41) 김민재, Ibid., pp. 26~28참조.

42) 이정복, “東歐 공산주의체제의 성격과 변화,” op. cit., p. 351~352참조.

제 3 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동구제국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탈스탈린주의적 경제개혁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엽에 대체적으로 좋게 평가되었던 이들 제국의 경제는 1970년대 말엽에 이르러서는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80년대에든 뚜렷한 발전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⁴³⁾ 그러한 원인은 우리는 동구공산체제의 이상과 같은 탈스탈린적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뚜렷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단편적인 변혁에 불과하다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 한계란 다름아닌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테두리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 성격상 그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장경제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과격한 개혁이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의 체제 정통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체제내의 변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치적 개혁이 먼저 동반되지 않는 한 경제개혁의 혁신적 추구는 뚜렷한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음은 다 아는 바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동구제국이 보여준 단편적인 경제개혁이란 스탈린주의적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대응책이요, 하나의 처방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Ⅲ. 맺 음 말

우리는 지금까지 동구공산체제가 오늘날 어느 정도 그 체제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아직 '변화하지 않은 부분국유화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논의의 전제는 현재까지도 전체주의적 체제요소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그 가정을 확인하고 논증해본 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상의 논의를 집약해 볼 때 동구공산체제의 성격은 그 체제가 출발하면서 수입한 스탈린주의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부분적인 개혁과 변화가 있었다라도 그것은 동구의 스탈린체제를 그대로 유

43) 동구제국의 70년대 경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정창영, "동구제국의 경제체제와 정책", 金達中外 共著, 「동구 정치·경제·사회론」, op. cit., pp.83~111참조.

제3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지시하기 위한 일련의 자구책이요,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전히 동구제국은 일당독재에 기초한 당위주의 국가운영이 되고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테러나 숙청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정치사상교육도 당의 주도하에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도 변화가 뚜렷했다고 지적해 볼 수 있는 면은 경제개혁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사회주의적인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라는 큰 테두리내에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를 전개시키는 과정속에서 의당히 제기되어야 할 의문을 우리는 그냥 넘겨왔다. 즉, 그 의문이란, 이상의 논의에서 처럼 동구제국이 스탈린주의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 무엇때문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새롭게 규명해볼 여지는 없지만, 그 까닭의 몇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맺도록 하겠다.

첫째는 동구제국의 개혁의지에 대한 소련의 통제때문이다.⁴⁴⁾ 동구는 그들의 공산체제 구축과정에서 부터 소련의 힘에 의존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실로 소련의 중대이익을 위협한다고 소련지도층이 인지할 때, 소련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가 하는 예는 여러가지로 나열할 필요가 없다. 체코내의 개혁요구가 과열되고 두브체코정권이 억제는 커녕 선도역활을 하자, 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맹군들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주의가 성취한 것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구실을 만들어 개혁운동을 탄압하려고 체코내정에 무력개입했던 사실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동구국가의 지도자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유고나 알바니아와 같이 소련의 도움이 없이 공산화에 성공한 경우에는 소련의 영향력을 그대로 배제하기가 수월했으나, 동독이나 불가리아, 헝가리 및 체코의 경우에는 소련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소련의 이익과 합치되는

44) 이에 대해서는 Teresa Rakowska-Harmstone, "Eastern Europe communism in the Seventies," in Morton A. Kaplan (ed.), *The Many Faces of Commun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194와 Jan F. Fiska and Paul M. Johnson, "Political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75), p.277참조.

제3장 동구 공산체제의 특징

방향으로 이끌어 갔음을 보게 된다. 폴란드의 고물카는 비록 소련과의 대결을 통해서 당제1서기가 되었지만, 소련에서의 교육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코 소련의 체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상의 것 외에도 그 나라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지정학적 위치 등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런 점들은 좀더 많은 연구와 규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